

일본 정부, 탄소세 도입할까요?

일본정부는 1990년 대비 온실가스 25% 감축목표(2020년)를 국제사회에 약속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서 환경세 도입을 논의해 왔는데 이하에서는 그 논의 경위와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정리함.

□ 환경세 도입에 대한 논의 경위

- 환경세 도입논의는 1991년부터 시작, 2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도입에는 실패
 - 1991년, 환경성은 「환경세 연구회」를 발족하고 환경세 도입에 대한 본격적 검토 개시
 - 2001년, 환경성 자문기관인 「중앙환경심의회」에서 환경세 논의 개시
 - 2004년, 환경성은 중앙환경심의회 권고에 따라 4,900억 엔 세수 규모의 「구체적 환경세 안」을 처음으로 발표
 - 2008년 11월, 환경성은 세제개정 논의 시 환경세 안을 제시하고 도입을 요망하였으나 실패
 - 2009년 11월,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 후 「지구온난화대책세」 도입(민주당 공약사항)을 시도하였으나 실패

□ 환경세 도입 논의의 주요 특징

- 도입 주도기관: 환경성이 주축이 되어 도입 주장
- 환경세 도입의 근거: 저탄소경제의 조기실현, CO₂ 배출량을 대

상으로 과세, 환경투자 촉진, 환경산업 육성, 기후변화 대책비용 마련 등을 제시

- 민주당 정부의 정책방향: 이전의 자민당 정부보다 환경세 도입에 적극적
 - 민주당 정부가 제시한 「지구온난화대책세」(’09년 제안)의 예상 세수규모는 약 2조 엔으로 환경성 안(’08년 제안)의 약 3,600억 엔에 비해 대규모
- 기존의 에너지 관련 세제와의 조화문제: 일본에서도 석유제품 등에 대한 과세(에너지 세제)가 있어서 이 세제와의 조정문제가 중요한 과제
 - ‘08년 환경성 안은 기존의 에너지 세제의 유지를 전제로 추가적인 환경세 도입을 제시
 - 반면 ‘09년 「지구온난화대책세」는 기존의 에너지 세제를 폐지(예: 도로특정재원 잠정세율의 폐지)하고 이를 대체하는 대규모 환경세라는 점이 특징
- 부담경감 조치: 에너지 다소비 업종(철강, 시멘트, 농림어업 등)에 대한 면세 조치, 저소득층 배려 등을 검토
- 경제계의 입장: 경단련 등 경제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최근 환경세 도입을 찬성하는 기업 비중은 증가 경향
 - 환경성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(’08년 7월, 「환경친화적 기업행동조사」)에서는 환경세 도입 찬성(40.6%)이 조사 이후 최초로 반대(36.9%)를 앞서기 시작

□ 향후 전망

- 민주당 정부는 2011년도에 「지구온난화대책세」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
- 그 이유는 경단련 등 경제계와 경제산업성 등 산업관련 정부부처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
- 경단련 반대 이유: 생산거점의 해외 이탈로 인한 산업공동화 발생, 지구 전체적으로 감축효과 미미, 일본의 국제경쟁력 약화

□ 시사점

-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세 도입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책 재원 마련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과제
- 다만 단기간에 추가적 부담을 요구하는 환경세 도입은 조세저항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
- 특히 일본에서와 같이 기존의 에너지 세제와의 관계, 세수의 사용처 재조정 등이 정부부처 간 이해대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

<참고자료>

日本經濟新聞 (2009.12.23, 2010. 1.27)

遠藤真弘, 「環境税をめぐる状況－温暖化関連諸税を中心に」, 国立国会図書館 ISSUE BRIEF NUMBER 665(2009.11.27)